



## 세종정책브리핑 Sejong Policy Briefing

# 트럼프 방한을 계기로 본 미국정치와 한미관계

서 정 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 핵심 요약

- 2016년 트럼프 당선은 오바마 선거연합(Obama Coalition)의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가 저소득-저학력 백인 노동자 계층의 공화당 지지 쏠림이라는 역풍(revenge of identity politics)을 불러왔음을 확인시킴.
- 외교 정책의 거래적(transactional) 측면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미국 대통령들의 “안보-무역 연계(security-trade nexus)” 기조에서 탈피하여 “안보-무역 분리(security-trade decoupling)”에 관심을 가짐. 다만 한미 정상회담 때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트럼프-문재인 정상간 개인적 친분 관계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대폭 개선 및 안정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북한 이슈에 대해 트럼프는 예상을 뒤엎고 대화와 협상에 방점을 두는 톤(tone)을 사용하였으며 군사적 해결 방식에 대해 새로운 언급을 피함.
- 결국 미국이나 중국의 입장에 대한 분석 못지않게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먼저 우리는 스스로 어떤 해결책을 원하는지 토론하고 합의해야 함. 목표 달성의 로드맵과 전략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공론화 작업을 서둘러야 함.

\*본 정책브리핑에 개진된 의견은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닌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 1. 트럼프 당선 1년 후 미국 정치와 외교 정책 변화

-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힐러리보다 거의 3백만표 가까이 덜 얻고도 선거인단에서 승리(306-232)함으로써 제45대 대통령에 취임하였고, 취임 당시 40퍼센트 정도의 낮은 지지율, 잇따른 반대 시위와 민주당 하원의원 일부는 취임식에도 불참하였음.
- Bill Kristol, 네오콘 등 전통 보수주의자들이 트럼프 후보에 대해 줄곧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 바 있고, McCain, Graham 등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들과 불화도 많았음. 내각 장관 지명자 중 단 1명만 이전에 연방기관 수장 경험이 있을 정도로 정치신인들이 대거 행정부에 중용됨.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레이건으로 남을지 닉슨으로 남을지는 현재로서 불분명함.
-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예상보다 훨씬 지지세력 중심의 대통령 정치에 능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음. 무엇보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슬로건으로 정치적 우위를 선점하고 유권자들의 경제적 선호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미국 상원 중 가장 중요한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 위원장인 Orrin Hatch(R-UT)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또한 2008년과 2012년 모두 오바마를 지지했던 미국 내 카운티들 중 1/3이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하였고, 더구나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CNN 등 미국 주류 언론에 대한 보수/중도 유권자들의 불신이 증폭되어 있는 점도 트럼프에게 유리함.
-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1980년대 이후 남부와 북부 등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당 재편(partisan realignment)과 양극화(polarization) 심화 과정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임.
- 1980년 레이건 승리 이후 지속된 미국 대선 과정에서의 무역 문제는 주로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 혹은 일본 때리기(Japan bashing) 등 특정 국가 때리기 경향을 보였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주로 입장을 바꾸어 자유무역을 선도하는 추세를 보였음.
- 이와는 대조적으로 2016년 대선에서는 자유무역과 이민정책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반(反)세계화(anti-globalization) 정서가 트럼프 후보의 민족주의 성향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슬로건에 의해 구체화되고 지지를 얻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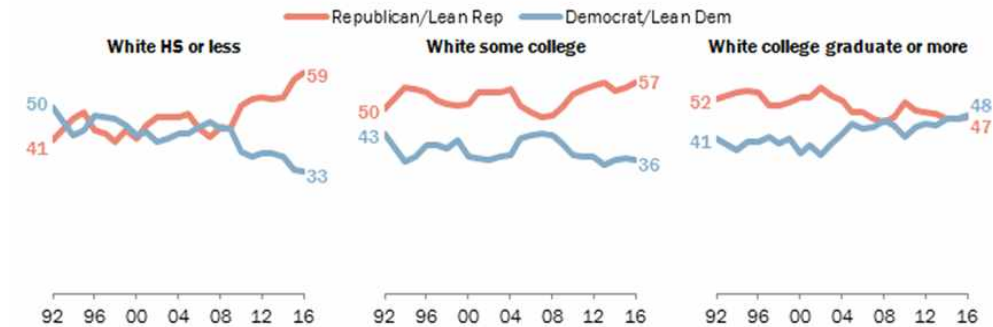
- 사실 2003년 조지 W. 부시에 의해 시작되고 2005년부터 국내 비판 등 수세에 몰리게 된 이라크 전쟁은 21세기 미국 정치가 19세기 고립주의(isolationism) 전통에 다시 관심을 가지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됨.
- 특히 1932년 대공황(Great Depression) 이래 최악의 2008년 금융위기와 맞물려 미국 국민들로 하여금 해외전쟁이나 자유무역 같은 국제 문제보다는 경제 침체, 소득 불평등 같은 국내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는 대통령 후보와 정치인에 주목하도록 만들.
- 2008년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공화당 맥케인(McCain) 후보를 따돌리고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노동자를 해고한 적이 있는 기업인 이미지에다 아버지의 후광을 입은 금수저 스타일의 롬니(Romney) 후보를 제치고 2012년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의 주된 관심도 결국 미국 국내 문제 해결("nation-building at home")이었음.
- 다만 오바마의 경우 2008년 선거 과정에서 경제 재건과 테러와의 전쟁 공조를 위해 중국 때리기를 자제한 후보였고, 대선에서 승리한 후 의료보험 개혁(ObamaCare)과 구제금융 통한 경기 회복뿐만 아니라 오사마 빈 라덴(Bin Laden) 사살, 한미FTA 의회 승인,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등 국내외적으로 적극적 행보를 이어 왔음.
- 오바마 시대와 그 이후의 미국 정치 변화를 고려할 때 주목할 점은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 경향인데, 오바마가 두 번의 선거를 모두 승리하면서 만들고 공고히 한 오바마 연합(Obama Coalition)은 주로 청년층, 흑인, 라티노, 여성층, 동성애자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음.
- 마치 1932년 뉴딜 연합(New Deal Coalition)을 건설한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의 남부와 북부 연합과도 유사한데 당시에는 도시 빈민층, 흑인, 가톨릭, 노조 등을 민주당 지지층으로 끌어들였고 적극적 정부(active government)라고 하는 미국 정치 초유의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음.
- 그런데 이러한 오바마 선거연합의 정체성 정치는 2008년 이후 역풍이 거세게 불었고 2010년 중간선거와 2014년 중간선거에서 오바마 민주당이 크게 패한 이유이기도 함. 그 역풍은 저소득-저학력의 백인 노동자 계층이 공화당 지지로 쏠림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는 점인데 일종의 정체성 정치의 복수("Revenge of Identity Politics")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그림 1>에 의하면, 2008년 오바마 당선 이후 저학력 백인 유권자들이 거의 2대 1 비율의 공화당 지지로 돌아선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음.

### <그림 1> 학력별 백인유권자들의 지지 정당 변화 추세, 1992-2016

#### White voters with no college experience move toward the Republican Party

% of white registered voters who identify a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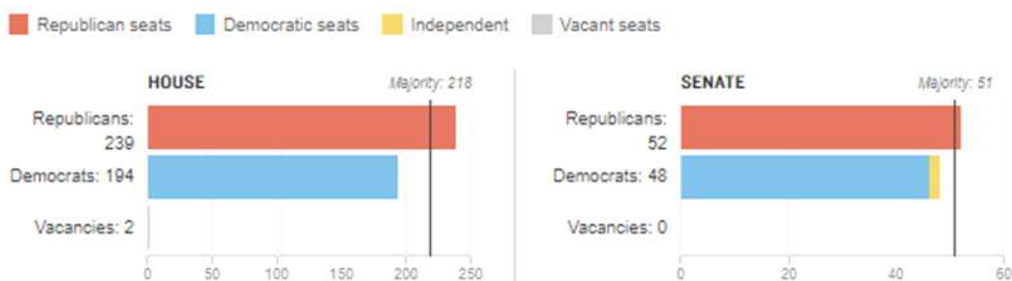
Notes: Based on white registered voters. Whites include only those who are not Hispanic.  
Source: Annual totals of Pew Research Center survey data; 2016 data based off surveys conducted January-August.  
PEW RESEARCH CENTER

- 구체적으로 공화당의 경우 소위 “트럼프-배논” 그룹(Trump-Bannon Wing)이 당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상원 원내 대표 맥코넬(Mitch McConnell)을 포함한 기존의 공화당 주류 세력에 매우 적대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음.
- 심지어 12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는 앨라배마(Alabama) 연방 상원의원 보궐선거(special election)의 공화당 후보로 트럼프가 지지했던 후보가 낙마하고 배논이 지지했던 로이 무어(Roy Moore) 후보가 승리하였음. 물론 후보 결정 이후 워싱턴 포스트에 의해 폭로된 무어 후보의 스캔들로 앨라배마 보궐 선거의 향배가 어찌 될지 예측은 어려움.
- 맥코넬 원내 대표도 상원지도자펀드(Senate Leadership Fund)라는 정치행동위원회를 조직하면서 배논과의 일전(一戰)을 불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공화당의 주류 세력이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거의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고 배논 세력이 각광받고 있다는 사실임.
- 다만 배논 세력이 내세우는 보수의 가치가 주로 민족주의(nationalism)와 국수주의(nativism)로 구성된 포퓰리즘 성향이라는 점이 일종의 한계이며 무어의 경우처럼 배논이 영입하는 후보들의 자질 문제가 대두되면 여전히 레이건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공화당의 내전(civil war) 향배는 예측불허임.

-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11월 7일에 치러진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였는데, 민주당 수성이나 공화당 탈환이냐가 관전 포인트였음. 공화당의 길레스피(Ed Gillespi) 후보의 경우 부시 행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위원장을 지내는 등 일종의 주류 후보(establishment candidate)이었으나 캠페인 기간 동안 트럼프 스타일의 이민 반대 정서 중심 선거 운동을 벌였음.
- 공화당 후보는 선거 막판 약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노덤(Northam) 후보에게 비교적 큰 표 차로 패배하였고 현재 공화당의 정체성 변화와 관련하여 그 복잡성을 그대로 노정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민주당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 2018년과 2020년 선거를 앞두고 반(反)트럼프(anti-Trump) 슬로건을 제외하고 왜 민주당을 지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 만들기에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상황임. 버지니아 선거를 앞두고도 중도 전략을 취할지 진보 전략으로 정할지에 대해 내분이 있었고 결국 중도 성향의 노덤 후보에 대해 민주당 진보세력이 비판적이었음. 그러나 버지니아 같은 중도 성향의 주에서 민주당의 중도 후보가 승리를 거둔 사실은 이후 선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 결국 다음 전국 선거인 2018년 중간선거가 트럼프 대통령 시대 미국정치 변화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115대 의회 239 대 194 의석 상황인 하원 선거는 여전히 공화당에게 유리한 상황이며, 상원의 경우 선거를 치러야 하는 현직자들(incumbents) 중 민주당 상원의원들(25명)이 공화당(8명)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이 중 10개 주는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주임(그림 2 참조).

## <그림 2> 115대 미국 의회(2017-2018) 상하원 정당별 의석 수 현황

Current Balance Of Power In Cong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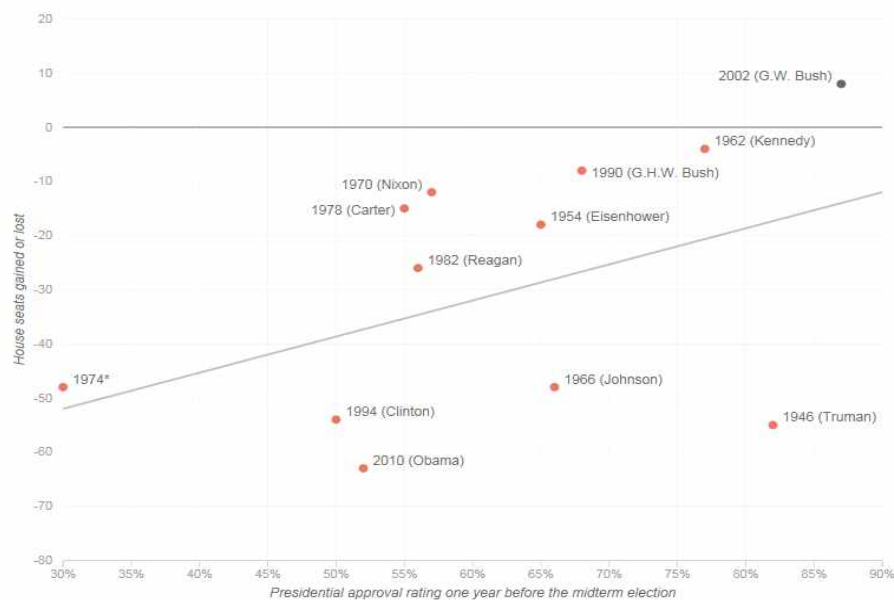
**Note:** The two independent members of the Senate — Angus King of Maine and Bernie Sanders of Vermont — caucus with the Democrats.

Sourc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Office of the Clerk

Credit: Alyson Hurt/NPR

- 다시 말해 민주당이 현역 의원 주에서 모두 승리하여도 공화당이 주로 보수 성향인 거의 모든 상원 선거 주들에서 승리하면 현재의 52대 48 공화당 우위가 유지될 것임.
- 물론 역대 전통으로 보면 중간선거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대통령 소속당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 대통령 지지율이 하나의 예상 척도가 될 수 있음. 9/11 사태 이후 지지율이 높았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공화당이 2002년 중간선거에서 의석수를 늘린 경우를 제외하면 낮은 지지율이 큰 의석수 상실과 관련이 있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0퍼센트가 거의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지지율 중의 하나이며 승자독식의 대통령 선거인단 방식과는 지역구별 선거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게 불리할 수 있음.

<그림 3> 역대 대통령 지지율과 중간선거 의석수 증감 관계



Note: The 1974 midterm election occurred the same year that Richard Nixon resigned and Gerald Ford became president. The approval rating shown is Nixon's from October 1973.

Source: Gallup; Brookings Institution's *Vital Statistics on Congress*  
Credit: Alyson Hurt and Jessica Taylor/NPR

## 2. 2017년 11월 트럼프 방한(訪韓) 전후 미국정치 동향

- 2017년 11월 현재 트럼프는 취임 후 1년 동안 의회에서 통과된 정치적 승리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세제 개혁(tax reform) 법안의 의회 승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형편임.

- 이미 상원에서 통과된 세제 개혁 법안 결의안(budget resolution)을 10월 26일 하원이 216-212로 통과시켰음. 최근의 ObamaCare repeal and replacement 시도 경우처럼 budget reconciliation 의사 규칙을 이용하여 필리버스터 없이 단순 과반수(51표)로 상원에서 세제 법안 최종 통과가 가능해짐. 하원은 11월 중순 현재 이미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에서 구체적 세제 개혁 법안을 발의했고, 상원 재무위원회도 지난 11월 9일 상원 단독의 세제 개혁 입법을 공포하였음.
- 대선에서 공약한대로 기업세금(corporate tax rate)을 3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감면하고, 중산층 세금을 대폭 줄이며, 세금 코드를 단순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 공화당 하원내 Freedom Caucus가 정부 지출 한도를 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화당 상원에서 Susan Collins 의원이 다소 부정적인 입장임.
- 공화당 정당 색채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도 관련이 있는데 균형 예산(fiscal responsibility)과 세금 감면(tax cut) 이라고 하는 일종의 상충되는 정책 가치 사이에서 레이건 시대 이후 세금 감면 쪽에 정치적 방점이 찍히는 상황임. 다만, 트럼프 세제개혁 법안이 부자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가 있는 것에 대해 백인 저소득-저학력층을 주요 지지층으로 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와 관련 정치적 포장에 성공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 트럼프는 선거 기간과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미국 주류 언론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미디어와 불편했던 닉슨(Nixon)과 유사하지만, 잘 알려진 대로 소셜 미디어 특히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정책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고 있음.
- 실제로 소셜 미디어 중심의 대통령 입장 표명은 트럼프가 미국 정치 역사상 처음이며, 그 함의는 기존의 대통령 직접 소통 방식("bully pulpit power" 혹은 "going public strategy")과 다른 양상("Snapchat Presidency")인 이유로 향후 정치학의 연구대상임.
- 결국 의회, 특히 상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동시에 주류 언론과 대적하는 트럼프의 정책 수단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과 트위터/질의응답/연설 등의 언어적 방식(verbal communication)임.
- 트럼프의 행정명령 의존은 취임 이후 현재까지 TPP 탈퇴, Travel Ban, 파리기후협정 탈퇴, DACA 6개월 유예 후 폐지 등 현대 미국정치에서 나타

나는 대통령의 일방 권력(unilateral power/“power-without-persuasion”) 차원에서 볼 때 새로운 현상은 아님.

- 이에 비해, 특히 북한 핵개발 위기와 관련된 트럼프의 반복되는 트위터/연설/질의응답 내용은 미국외교정책의 신뢰도(credibility) 뿐만 아니라 책무성(commitment)까지 의심케 만드는 부작용을 양산 중이며(fire and fury/locked and loaded/talk of appeasement/totally destroy North Korea/a waste of time/the calm before the storm 등)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관련 발언의 한계효용 체감 가능성을 높임.
- 다만 트럼프의 대북 군사행동 관련 즉각적 정책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누적효과로 인해 그 가능성은 상존하거나 높아지는(not surprising any more) 역설적 상황임.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상에서의 complainer-in-chief 관심을 접고, 미국 제도정치상의 commander-in-chief로 변신하고자 시도할 때 보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실제로 트위터를 통한 군사 행동 가능성 경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의회에 대통령의 무력 사용 권한(use of force)을 허용하는 결의안 채택을 요청한다면 북한 핵 위기가 국내적으로 고조되어 있는 현 상황과 더불어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현재 115대 의회 구도 상 의회가 대통령에게 use-of-force 권한을 불허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 의회가 소위 “North Korea War Resolution”을 통과시킨다면 한국 경제는 자본유출(capital flight) 등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위해 2002년 중간선거 한 달 전 미국 의회를 상대로 “presidential use-of-force”를 핵심 골자로 하는 Iraq Resolution을 표결케 한 George W. Bush 사례와 비교될 수도 있음.
- 또한 10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 오바마가 맺은 이란 핵협정(JCPOA) 내용 중 이란의 협정 준수 여부에 대한 불인증(decertification)을 발표하고 60일 시한으로 의회에 공을 넘겼는데. 평소 트럼프와 자주 충돌했던 맥케인(McCain) 상원 군사위원장, 코커(Corker) 상원 외교위원장 모두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대통령 견해 존중을 발표하였음.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북한 관련 말 폭탄만 던지는 지금이 역설적으로 북한 핵 이슈를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임.
- 방한 기간과 겹치는 트럼프 당선 1주년(2016년 11월 8일)을 돌아볼 때 예

상을 뒤엎고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3개 주를 승리하여 대권을 획득한 트럼프의 후보 시절과 집권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여전히 예측불허이고(Trump vs. McConnell(SLF) vs. Bannon), 여전히 설화(舌禍)를 반복하고 있고(Gold Star families), 여전히 트위터를 애용하고 있으며, 여전히 주류언론과 적대적이고, 여전히 백인 노동자계층을 중시하며, 여전히 자유무역에 반대하고 있고, 여전히 반(反)이민정책 및 멕시코 장벽 건설에 집착하고 있음. 역설적으로 미국 역사상 자신의 선거 공약을 대통령 당선 이후 가장 충실하게 실천하는 “약속의 정치인”으로 인정될 수도 있음.

### 3. 트럼프 방한(訪韓): 실제 및 평가

- 논란이 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군사옵션 언급은 전면전으로 비화될 개연성이 크므로 문대통령이 이미 밝힌 대로 “한국의 동의”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자 전략임. 우리 국익에 기초한 철저한 “한미공조” 차원에서도 미국의 이해를 촉구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한국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와 “한국의 동의 없이는 못 한다”를 철저히 구별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다시 말해 북한 핵과 미사일이 미국의 안보 위기로 인식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의 동의 없이도 자체 판단에 따라 대북 군사옵션을 사용할 개연성이 매우 높음.
- 현지 언론이나 여론에서 미국의 대북 군사 행동 과 관련하여 “한국의 동의” 부분은 일체 거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미국 역사를 통해 볼 때 한국의 동의가 없으면 미국이 대북 군사옵션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보기는 어려움.
-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 2조의 내용 중 “consultation과 agreement”를 지나치게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함. “consent 혹은 approval” 이라는 단어는 빠져 있는 상황이며 만일 “동의” 단어가 들어가 있었다면 독자적 군사력 사용을 중시하는 미국 전통상 1954년 1월 미국 상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절대 통과되지 못했을 것임.
- 결국 앞서 제기한대로 트럼프가 의회에 군사력 사용 권한 허가를 요청하는 상황 혹은 더 나아가 16만 명의 한국 내 미국인들을 소개(evacuation)

하는 상황이 도래하는 경우 한국은 무엇을 할 것이며 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함. 하지만 한미동맹 파기 가능성을 미리 언급해 두는 것이 현명한 전략은 아님.

- 기본적으로 트럼프 경우 대통령으로서 아시아 순방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아시아 특유의 격식 갖춘 접대 때문에라도 미국에서 보여주던 자유분방함 대신 스크립트에 써 준대로 대부분 행동하였다고 보임. 아시아와 미국 간의 낮밤이 뒤바뀌는 시차 문제도 있고 특히 1박 2일간의 방한기간이 짧고 이동이 잦아서 자신만의 정치적 스페이스(space)를 가질 경황이 없었던 것으로 이해되기도 함.
- 2017년 11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캠프 험프리스 평택 미군기지 방문,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 및 확대 정상 회담, 국민 만찬, 미국 대사관 직원들 격려 방문, 국회 연설, 국립 현충원 참배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음.
- 우선 정상회담(summit meeting)에서 가장 큰 관심사로 부각되는 두 정상들 간의 친밀도 측면에서 볼 때 이번 방한은 지난 두 번 사례보다 진전된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음. 우선 문 대통령이 예고에 없이 평택 미군 기지에 먼저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리며 맞이한 점, 다음 날 비록 기상 악화로 무산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DMZ 전격 방문 시도에도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던 점 등 트럼프와의 개인적 관계 개선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고 볼 수 있음.
- 트럼프도 이전에 제기했던 한국의 유화적 태도("talk of appeasement")에 대한 비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트위터에 문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칭찬 등을 올린 바 있음.
- 이를 통해 이미 해외 언론에도 잘 알려진 대로 트럼프-아베 친밀도에 비해 트럼프-문재인 관계는 그리 가깝지 않다는 시각을 어느 정도 불식한 점이 있음. 무엇보다 최대의 안보 위기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엇박자를 내지 않을까 우려하던 국민들에게 일종의 안정감을 준 정상회담이었음.
-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상 언제든지 트위터 혹은 지지자 집회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기조의 대북한 강경 정책에 대해 공언할 수 있고, 문재인 행정부 역시 인도-태평양 라인에 대한 재해석 논란에서 엿보이듯 트럼프 행정부와 100퍼센트 정책 공조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임.

-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북한 이슈에 대해서 트럼프는 예상보다 훨씬 외교에 방점을 두는 톤(tone)이었음. 물론 국회 연설에서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우리를 시험하지 말라 (Do not underestimate us, Do not try us.)등의 대북 경고 발언을 빠뜨리지 않았지만, 우려했던 군사 옵션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완화된 입장을 보였다고 평가됨.
- 이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훨씬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한국 국회 연설에 포함시키기 원했지만, 트럼프 외교라인의 만류를 받아들였다고 함. 하지만 트럼프 자신의 골프 코스(Trump National Golf Club)에서 한국 골퍼가 우승한 것에 대한 내용은 측근들의 부정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함시켰음. 클린턴 행정부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올브라이트 장관 등은 이를 두고 강력 비난함.
- 역설적으로 기상악화로 취소된 DMZ 방문이 성사되었다면 트럼프 특유의 즉흥 발언을 통해 대북 강성 메시지가 공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한미FTA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트럼프의 입장 변화와는 무관함. 오히려 무기 수출과 투자 유치 등 한국, 일본, 중국에서 거의 370조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비즈니스맨 대통령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측면이 큼.
- 문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문 대통령의 미국산 무기 구매 관련 간단한 발언 이후 개입하여 막대한 금액의 무기 구매를 한국과 합의했다는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첨언할 정도임. 중국에서도 중국과의 무역 역조를 언급하면서도 ‘중국을 비난하지는 않는다(“I don’t blame China”)’라고 한 바 있음. 이로 인해 미국 국내 언론에서 지나치게 중국의 비위를 맞춰 준 트럼프의 태도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있음.
-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도착 직후 한 발언처럼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 목적에는 미국내 일자리 창출, 미국내 투자 증진, 미국 무기 수출 등이 주로 포함되어 있으며, 아시아 순방 기간 중에도 계속적으로 트윗을 동원 자신의 세일즈 외교를 홍보한 바 있음. 중국 방문 이후 APEC 정상 회담으로 향하는 중에도 “미국을 더 이상 우려했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I am not going to let the United States be taken advantage of any more.)”라는 발언을 함.

- 흥미로운 사실은 정상회담 이후 한국 언론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국 내에서 논란이 되었던 소위 “코리아 패싱”에 대한 트럼프의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인데, 트럼프는 한국을 건너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함(“South Korea, the Republic of Korea, Korea is very important to me and there will be no skipping South Korea. I can tell you that right now.”) 이로써 소위 코리아 패싱에 대한 국내적 논란은 다소 수그러들 전망인데 미국 대통령의 한차례 발언으로 한국의 위상 및 현실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냉철한 국제정치 상황을 계속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인식해야 할 것임.
- 아쉬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미국의 언론이 한반도 상황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보도를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있었으나 방한 하루 전 발생한 텍사스 주의 교회 총기 난사 사건으로 26명이 목숨을 잃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미국 국내 언론은 온통 이를 보도하느라 트럼프의 방한 보도는 많지 않았다는 점임.
- 전통적으로 미국 언론은 해외 뉴스를 잘 보도하지 않으며, 대통령의 해외 순방도 간략하게 팩트 위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음. 더구나 이번에는 텍사스 주 총기 난사 사건과 미국 의회의 세제 개혁(tax reform) 논란, 그리고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등 국내 이슈에 대한 보도거리가 유독 많았음.

#### 4.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이후: So What?

-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아시아 순방 동안 소위 “트럼프 독트린(Trump Doctrine)”으로 불릴만한 새로운 미국 외교 대정책(American grand strategy)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는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었음. 왜냐하면 트럼프의 경우 국제이슈조차도 국내문제 접근법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이며 이는 트럼프 스타일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팽배해 있는 미국의 현재 정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임.
-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12일간의 아시아 순방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달라질 것은 없다는 사실인데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강화, 시진핑 주석과의 친밀도 과시, 아베 총리와의 지속적 유착이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 위기 해결에 필요한 구체적 다음 단계 정책과는 별 연관성이 없다는 점임. 예를 들어 “no skipping”이라는 트럼프의 발언이 한반도 군사옵션 사용과 관련하여 한국의 동의를 구하겠다는 공식 약속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임.

- 또한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가 트럼프에게 지나칠 정도로 공을 들이는 아베 총리를 두고 “충성스러운 조수(loyal sidekick)”라는 부정적 호칭을 내용으로 한 기사를 게재한 점은 주목할 만함. 트럼프의 강경 외교 정책에 반대하는 미국 국내의 정파와 언론 및 여론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우리 외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100퍼센트 초점을 맞추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국 전체를 고려하는 전략 수립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필요성과 관련이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성공적” 한국 방문 직후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중시 정책을 비판하며 문대통령을 “믿을 수 없는 친구(unreliable friend)”로 표현한 기사를 게재한 사실도 또 하나의 예임.
- 결국 각론 부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혹은 미국 언론이 다양한 발언과 입장을 낼 수 있다는 인식 하에 큰 그림의 합의와 책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동향 파악과 대책 수립에 못지않게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스스로 어떤 해결책을 원하며, 이를 위한 우리의 역할과 전략은 무엇이며, 구체적 달성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공론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봄.
- 사드 배치 문제나 위안부 합의 문제 등 이전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국민의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정부 주도의 외교 정책은 더 이상 그 실효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그러므로 북핵 위기를 둘러싼 해법과 관련하여 행정부와 국회, 언론과 전문가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목표와 전략과 관련된 토론과 숙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음.

☐